

# 주요 현안업무보고

2024. 4.

재무국

# I. 일반 현황

## 조직 · 인력

6과 33팀 238명/237명 (정/현원)

### 재무국

(2024. 4. 5.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재무과 3명, 38세금징수과 6명) 별도

## 기능

과 별	주요 업무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li><li>○ 계약제도 개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li></ul>
재산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li><li>○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li></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li><li>○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li></ul>
세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li><li>○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li></ul>
세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li><li>○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li></ul>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li><li>○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li></ul>

##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계	24,474,238	27,721,761	△3,247,522	△11.7%
시세외수입	24,235,274	24,112,184	123,090	0.5%
보조금	237,602	353,209	△115,607	△32.7%
보전수입등	1,362	1,511	△148	△9.8%
	-	3,254,857	△3,254,857	△100.0%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계	3,142,642	3,249,714	△107,072	△3.3%
인력운영비 (통합운영성비)	852,615	815,591	37,024	4.5%
기본경비	852	2,103	△1,251	△59.5%
재무활동	15,981	16,443	△462	△2.8%
사업비	2,273,194	2,415,577	△142,383	△5.9%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832	1,550	282	18.2%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4,353	25,351	△998	△3.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8	28	20	71.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13	1,808	5	0.3%
시세입 목표달성	13,454	5,100	8,354	163.8%
조세정의 실현	5,969	6,463	△494	△7.6%
타 기관 지원	2,225,725	2,375,277	△149,552	△6.3%
자치구 재정보전금	1,719,754	1,790,746	△70,992	△4.0%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	581,888	△78,571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54	2,643	11	0.4%

## 재산현황(市)

(2022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분	토지		건물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천㎡)
합계	57,560	106,434(100.0%)	69,989	13,277(100.0%)
행정재산	55,500	105,028( 98.7%)	6,232	5,660( 42.6%)
일반재산	2,060	1,406( 1.3%)	63,757	7,617( 57.4%)

## Ⅱ. 주요 현안업무 보고

---

1. 재정운영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결산검사 추진
2.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3.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공사의 품질 제고
4. 시민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5. '스마트폰 체납 안내 및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 현황
7.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징수목표 조기달성

# 1 재정운영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결산검사 추진

- ◆ 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들을 통해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 재정 운영 성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 승인
-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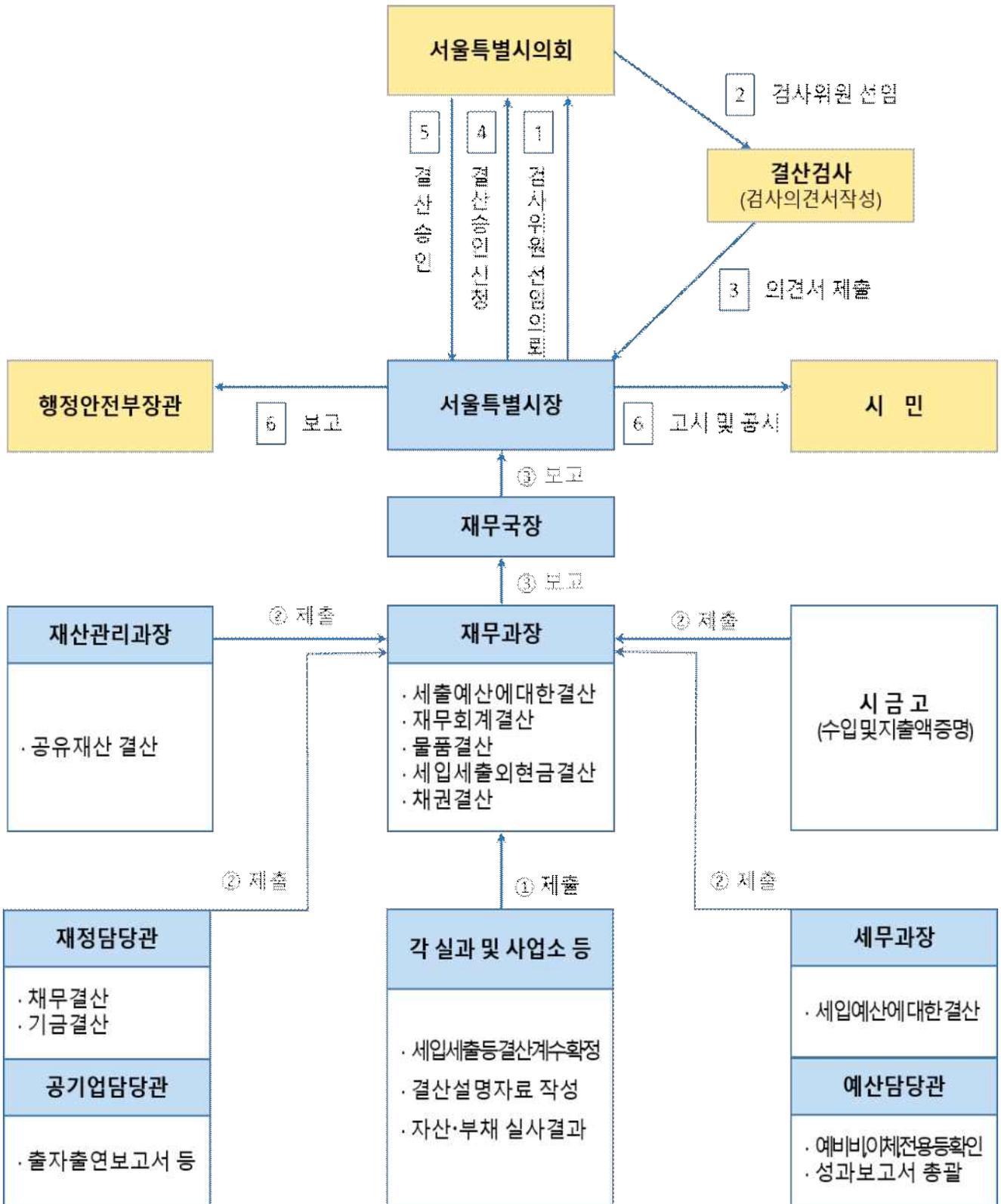
-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수립 : 1.12.(금)
- 결산 감사위원 선임(안) 의결(제322회 임시회) 및 위촉식 : 3. 8.(금)
- 2023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 3.20.(수)

## □ 결산검사 추진

- 검사기간 : 4.15.(월) ~ 5.19.(일), 35일간
  - 총괄설명회 4.15.(월), 결산검사 25일(4.15.~5.9.), 감사의견서 작성 10일(5.10.~19.)
- 감사위원 : 17명(시의원 3명, 민간위원 14명)
- 검사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검사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등

## □ 향후계획

- 결산승인(안) 및 결산서 의회 제출 : 5.31.(금) 까지
- 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 : 6.28.(금) 까지
- 결산 결과 고시 : 7. 3.(수) 까지



## 2 재산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 ◆ 국가지자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중앙 부처와 협력하여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지속 추진

### □ 추진배경

- 지자체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 소유권 관계가 미정립된 채로,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상호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관리 비효율 초래
- 국가와의 상호 점유재산 교환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 필요

### □ 추진내용

- 기재부와 **노후 경찰관서 중심으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1차 교환 완료**
  - ※ [취득]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 ⇔ [처분] 사유재산(10필지·29개동, 544억원)
    - 지적현황 조사, 현장점검 등 정밀 검토, 재산교환 목록 확정('23.7~9월)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감정평가 등 재산교환 사전 절차 이행('23.8~12월)
    - 교환계약 체결('24.1.25.), 소유권 등기 이전('24.4월 중)
- **1차 교환이후 남은 재산 검토, 타 부처 재산 등을 포함하여 2차 교환 추진(4월~)**
  - **국가점유 사유재산** ▶ 1차 교환 이후 남은 경찰관서(체비지 등) : 35필지, 33개동
    - ▶ 청와대·군사시설 등 경찰관서 이외 국가점유 사유재산 : 9필지, 2개동
  - **시 점유 국유재산** ▶ 소송중으로 제외했던 재산(탄천물재생센터 등) : 152필지
    - ▶ 실제 점유면적 분필 등 사전검토 필요 재산(서울공예박물관 등) : 45필지
    - ▶ 기획재정부 이외 정부부처 재산(국토교통부·환경부 등) : 111필지

### □ 향후계획

- 지적 현황조사, 현장점검 등 2차 교환대상 정밀 검토작업 실시(4~6월)
- 관련부처·각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목록 확정, 기재부에 교환 요청(7~8월)
- 공유재산심의(9월), 관리계획(12월), 감정평가('25.1월), 교환계약('25.2월)

### 3

##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공사의 품질 제고

- ◆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로 합리적 원가 산정기준 마련 및 설계 품질·시공 안전성 제고

### □ 추진목표

- 표준품셈이 없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공종의 합리적 원가 산정기준 마련
-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품셈 개발로 설계품질 및 시공안전성 제고

### □ 추진내용

- '11~'23년 총 130개 서울형 품셈 개발 및 심사 적용으로 777억원 절감
  - 토목 59개, 건축 12개, 조경 14개, 기계 19개, 전기 26개 개발
  - 개발 품셈은 4,779개 사업 계약심사에 적용하여 777억원의 예산 절감
- '24년 3월 신규 서울형 품셈 18개 개발 완료 및 정부품셈 8개 등재 추진
  - 협회,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계 분야 10개 및 전기 분야 8개 품셈 개발
  - 전기 분야 8개 품셈은 하반기 정부품셈으로 등재 및 전국 지자체 전파
- 알기 쉬운 「서울형 품셈 해설서 2.0」 제작 및 대내·외 배포(3월)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식 등을 활용한 해설서 제작
  -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관련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 □ 향후계획

- 서울형 품셈 11개(토목 7, 건축 1, 조경 2, 기계 1) 신규 개발 : ~ '24년 12월
- 서울형 품셈의 정부품셈 등재 추진 : ~ '24년 12월

## 4 시민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세금 약자의 세금 고민 해결 및 권익 보호 강화

### □ 추진방향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확대하여 수혜지역 다변화 (총 42회 예정)
- 제6기 마을세무사 무실적동 통폐합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22~’23년(제5기) : 428명



’24~’25년(제6기) : 296명

### □ 추진내용

- 시민 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수요집중시설로 확대(4월~)
  - 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한 상반기 상담기관 수요조사 실시(1~2월)
    - ▶ (상반기) 복지관 6회, 전통시장 등 16회 총 22회 현장 세무상담 실시 예정
  - ’24. 3월말 현재 복지관 3회, 전통시장 등 2회 **총 5회, 47명** 세무상담 실시
  - ※ (’23년) 복지관 10회, 전통시장 등 25회 총 35회, 305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에 따라 시민과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4월~)
  - 다중이용시설(동주민센터, 은행 등)에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시 및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 마을 세무사 명단 현행화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 전광판 표출 등 홍보 강화

### □ 향후계획

- 상반기 대상기관 ‘찾아가는 세무상담’ 지속 실시 : ’24.4월~
- ’24년 하반기 상담기관 수요조사 실시 및 상담 시행 : ’24.7월~

## 5

# '스마트폰 체납 안내 및 납부서비스' 확대 운영

- ◆ '23.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서비스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 및 환급,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서비스 확대

### □ 추진방향

-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
- 지방세에 한정된 서비스를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으로 확대

### □ 추진내용

- 묶음알림, 선별발송, 통계기능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증대(4월 완료)
  - 다수의 체납을 묶어서 한 건으로 알림 발송, 발송조건을 세분화하여 발송
  - 발송회차별, 일자별로 발송·수신·열람·납부 통계 제공으로 차기 알림발송 시 참조
- 발송 대상을 카카오페이 회원(30백만명) ➡ 카카오톡 회원(42백만명)으로 개편하여 카톡안내 수신율 및 체납징수율 제고(5월)
- 환급 카톡안내 후 ETAX로 환급신청하는 서비스 도입으로 환급신청 경로 확대(5월)
  - (현행) 우편·문자 등으로 환급 안내 → (개선) 스마트폰 환급알림 서비스 추가
- 체납 카톡안내의 수신율·열람률·징수율 분석으로 서비스 최적 운영방안 마련(9월)
  - 카톡안내 발송을 도와줄 협력자치구(14개구) 모집 및 월별 안내기준(세목/체납 건수/금액/연령/내·외국인 등) 협의·발송
  - 협력자치구의 체납 알림 발송 결과를 시에서 분석하여 효율 높은 최적의 서비스 이용 방안 마련 → 자치구에서 안내 시 활용토록 쏠 자치구로 전파
- 세외수입체납 카톡안내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개시(11월)
  - 체납자에게 카톡알림으로 세외수입체납 안내, 본인인증 후 ETAX에서 체납액 납부

### □ 향후계획

- 카톡안내 서비스 결과 분석 후 보완점 개선하여 서비스 완성도 제고
- 카톡알림으로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업무 지속발굴 및 서비스 확대

## 6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대응 현황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개통되었으나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여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우리시 세입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 (추진주체) 위탁기관 행정안전부·전국 지자체 / 수탁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추진기간) 1단계(설계, '19.9.~'20.4.) 2단계(구축, '21.2.~ '24.2.) 3단계(서울시통합, '25.11.까지)  
※ 3단계(서울시 통합)는 4회 유찰(무응찰)로 사업추진 지연되었으며 2단계 개통 후 발주 예정
- (사업체계) 행안부 전국 표준시스템 및 서울시 세입시스템을 차세대로 통합
- (총사업비) 2,884억원(國765억, 地2,119억) (서울시 부담금) 227억원 ⇨ 127억원 지급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 (개통일) '24. 2. 13.(화) / (운영기관) **서울시 제외** 2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 (개통결과) 다수의 오류 발생으로 대민서비스 및 세무업무의 지연 또는 처리불가 ⇨ 개선요청 3만건, 개통 이후 한달간 전국 26만건 민원발생

👉 (우리시 영향) 우리시는 차세대와 705종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용 중으로 자치구별 일 평균 40~50여 건 민원 발생 중

- 납세자대장에 미등록된 법인격 없는 사업자, 폐업사업자 등의 회원가입, 신고 등 업무처리 불가
- 신고·납부내역 조회 오류, 가상계좌 전송 지연, 묶음납부 오류로 수납완료 불가 등 Wetax 오류 발생

## □ 개통 이후 대응 사항

- 행안부에서 오류 처리지침 미공지로 서울시에서 지침 마련 및 자치구 배포
- 묶음납부\* 오류에 대하여 수기 수납정산 처리 및 모니터링

\* Wetax에서 서울시와 타시도 부과분을 모아서 한 번에 납부하는 서비스

- 연계 및 기능오류 점검하여 행안부에 수정 요구

※ (행안부) 4월까지 오류 보완 완료, 정기분 부과 일정(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에 따라 안정화 예정

## □ 향후계획

- 오류 유형별 분석, 검토 후 행안부에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 발생빈도 높은 민원(법인격 없는 사업자의 회원가입 불가 등) 처리를 위한 자치구 지속 지원

## 7

#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징수목표 조기달성

- ◆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국가기관 등 협업을 통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시세 징수목표 조기 달성

## □ '24년 체납징수 목표액 : 2,222억원

- '24. 3월말까지 1,187억원 징수(목표 대비 53.4% 달성)

## □ 추진실적

- 1조사관 2소송·범칙행위 고발 확행으로 재산 은닉자 강력 대응(연중)
  - 사해행위취소, 상속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등 소 제기 강화(예고 포함 44백만원 징수)
    - ▶ 예고 40건(사해 12, 근저당 말소 8, 대위등기 26), 대위등기촉탁 14건
  - 체납징수 공무원 소송역량 교육(3~4월) : 내부전문가(2회), 외부전문가(1회)
- 국가기관 등과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 및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 전개
  - 서울세관(MOU 3. 7. 체결)·건강보험공단(4월 합동수색)과 체납자료 공유로 협력 강화
- 채권 일괄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제공으로 시구 징수 강화(1~3월)
  - (1천만원 이상) 제1금융권 5,565계좌·제2금융권 103계좌 제공 : 12억원 징수
  - (1백만원 이상) 법원 공탁금 26,542건 제공(추진중), 보관금 등(4월 조회의외)

## □ 향후계획

- 국가기관 협업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현장 징수 활동
  - 시·관세청 합동 가택수색(5월,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가택수색(4월, 9월)
- 시·자치구·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납차량 합동 단속 추진
  -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4. 30.(화))
  - 시·구·경찰청·도로공사와 톨게이트(하반기)·야간음주단속(11월)시 합동 체납차량 단속

### III.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개선 건의 (세제과, '24. 3. 5.)</p>	<p><input type="checkbox"/> <b>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세무대리인이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해주는 제도</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 5px 0;"> <p><b>*세부 지원 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amp;재산가액에 배우자분 포함</li> <li>-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출국금지대상·명단공개대상) 배제</li> </ul> </li> <li>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li> </ul> </li> </ul> </div> <p><input type="checkbox"/> <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우리시 2건 지원 ('22년까지 전국적으로도 100건 지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건의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세액 기준 상향(1천만원→3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시행('20년) 이후 인상된 주택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li> </ul> </li> <li>○ 배우자 합산 조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소득금액과 소유재산가액 조건 판단 시 배우자 합산 요건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재산가액이 소액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li> <li>※ 국세(국선대리인)도 배우자 합산하지 않음</li> </ul> </li> <li>○ 영세법인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금액 3억 이하 및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영세법인도 지원 범위에 포함</li> <li>※ 국세(국선대리인)도 영세법인 지원 신설 (2024. 4. 1.부터 시행 예정)</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관련 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li> <li>○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li> </ul>	<p>(행정안전부)</p>